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만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42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5. 8.

발 의 자 : 이만희 · 구자근 · 서천호
엄태영 · 최은석 · 서명옥
이성권 · 김기웅 · 이달희
조은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, 이에 따른 인명 · 재산 · 환경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, 이러한 산림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림 지역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대형 산불진화장비 도입이 필요함.

무인비행장치(드론)는 접근이 어려운 산림 지역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나, 현행 항공안전법상 군용 · 경찰용 ·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에 한하여 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과 달리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는 비행제한구역, 야간 · 비가시권 비행 금지 등 여러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산림감시 활동이 어려움.

산불진화용 초대형 헬기(8,000ℓ 이상)의 경우 미국에서 형식증명 추진 중인 재생수리 된 중고 헬기가 유일한 실정으로 형식증명 미인증

시 납품이 불가하고, 도입하더라도 우리나라 국군에서 사용하는 초대형 헬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미군에서 4,000시간 이상 사용 후 퇴역하는 중고 헬기를 재생수리 및 형식승인을 거쳐 납품되는 실정임. 미국 또한 미군에서 퇴역하는 중고 헬기를 자국의 소방용으로 사용 중이므로 우리나라 군에서 퇴역하는 헬기를 소방헬기로 전용 가능 하도록 법안을 개정이 필요함.

주요내용

- 가. 군에서 10년 이상 운항하여 안전성이 증명된 항공기의 감항증명 검사 일부를 생략하여 군 헬기를 산불진화에 도입하고자 함(안 제23조제4항제4호).
- 나.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를 군용·경찰용·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같이 항공안전법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여, 산림재난의 조기 발견 및 예방,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함(안 제131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4항에 제4호를 신설한다.

4. 군에서 10년 이상 운항하여 안전성이 증명된 외국산 항공기
제131조의2제1항 중 “군용·경찰용 또는 세관용”을 “군용·경찰용·세관용 또는 산림감시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3조(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) ① ~ ③ (생략)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설계, 제작과정,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검사하고 해당 항공기의 운용한계(運用限界)를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	제23조(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신설>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⑤ ~ ⑨ (생략)	4. <u>군에서 10년 이상 운항하여 안전성이 증명된 외국산 항공기</u>
제131조의2(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) ① <u>군용·경찰용 또는 세관용</u> 무인비행장치와 이에	⑤ ~ ⑨ (현행과 같음) 제131조의2(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) ① <u>군용·경찰용·세관용 또는 산림감시용</u> -----

<p>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② ~ ③ (생 략)</p>	<p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